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키로

- 양돈협, 부가세 면제 대정부 요구 및 국회의원 설득 지속추진 결과

홍보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2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건과 관련, 예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이 '의료보전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당초 국세청 해석대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에 과세가 되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고스란히 입게 될 약 160억원 가량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올 초 국세청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거 5년간 물량에도 부과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와 관련,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에 과세가 될 경우 과거 5년간 부가세 추정금액만도 158억원에 달하고,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2012년까지는 약 102억5천만원의 부가세 부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올해 추정 금액만도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부과액이 고스란히 축산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돈협회는 또 해양배출협회와 뜻을 모아 환경

부 등 정부 담당자와 지속 면담을 시도하여 가축분뇨 해양배출업도 오분법에 의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환경부 해석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부에 부가세 부과 면제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설득도 지속 추진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부가세 면제 결론을 도출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행정착오를 바로잡은 재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양돈인들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에 진력, 해양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돈협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경우 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 철회 요청을 공식 요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출, 이번 재정부 방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처럼 양돈협회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서는 한편,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가 이어지는 등 이번 사례는 향후 양돈관련 정책 및 제도들이 개선되는 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양돈**